

해남 솔라시도, 2.4조 규모 국가 AI컴퓨팅센터 부지 확정

삼성SDS 컨소시엄 선정...SPC 설립 후 7월 착공 본격화 GPU 5만장 단계 구축...AI 연구·산업 인프라 거점 부상

해남 솔라시도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부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전남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규모 연산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센터 집적화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서 솔라시도를 부지로 제안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최종 참여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삼성SDS를 중심으로 네이버클라우드, 삼성물산, 카카오, 삼성전자, KT, 클리쉬, 전남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등이 참여한다.

이번 선정은 전남도가 사전에 준비해온 부지와 전력, 인프라 여건에 더해 삼성SDS 컨소시엄의 초고성능 컴퓨팅 구축 및 운영 역량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AI 산업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대규모 연산 능력 확보가 가능한 점이 결정적 요



국가 AI컴퓨팅센터 조감도.

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초거대 AI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집적해 산업계와 연구기관 등에 공급하는 국가 단위 인프라다. 정부는 2028년까지 GPU 1만5000장, 2030년까지 5만장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최대 수준의 AI 연산 자원으로, 데이터센터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실시설계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착공에 들어가 2028년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2030년까지 2조4065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출자금만 4000억원이 투입된다.

센터 구축이 현실화되면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형성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전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서버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 유입, 전문 인력 집중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산업 생태계 확장이 예상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생산유발액 6조4000억원, 부

가까지 1조5000억원, 고용 1만9500명 규모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시설 유치에 넘어 지역 산업 구조를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여건을 갖춘 솔라시도 특성상, 친환경 데이터센터 모델 구축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ESG 기준과 맞물려 추가 투자 유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전략의 핵심 축이 확보됐다"며 "글로벌 수준의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전남을 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학운초에 무궁화동산 조성 13일 광주 동구 운림동 학운초등학교에서 열린 무궁화동산 조성 행사에 참석한 광주 동구새마을회(회장 김대영) 지도자들과 학운초등학교(교장 조영철) 학부모 회원들이 무궁화 나무를 심고 있다.

여 "지역 핵심 성장거점에 '메가특구' 조성"

지선 공약 발표... "광역·초광역 국가전략산업 육성" 기후보험·우리아이자립펀드·햇빛소득마을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 핵심 성장거점인 '메가특구'를 두고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0개 공약을 발표하며 이 중 메가특구 공약과 관련해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함으로써 5급 3특 정책과 연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기후보험'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기후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보험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농촌재해보험, 전통시장의 지원책 그리고 공공건설 노동자들이 혹서기·혹한기에 일 못했을 때 비용을 보전 하는 것, 어르신들이 은연질환으로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아이 자립펀드' 공약도 발표했다. 출생과 동시에 정부에서 펀드를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을 정기 적립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햇빛 소득 마을' 정책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공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복지나 햇빛연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제도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정 대표가 밝힌 메가특구 공약과 관련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며, 중앙정부는 규제특례, 정책 패키지, 예산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가특구에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선택 가능한 규제 특례로는 △임지·인허가 △산업·기술 △노동·인력 △정주·교육 등 4대 분야다.

여기에는 환경·임지·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승인제와 신기술 시장진입, 기술 실증 등에 대한 원적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도 포함된다.

메가특구에는 또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을 아우르는 7대 정책 패키지 집중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며, 지방투자·외국인 투자 보조금 등을 우대 지원한다.

한 의장은 "메가특구에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를 우선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해 소득·법인세, 취득·재산세 등에서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른바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 의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별법 초안에) 규제 특례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다음 달 말이나 7월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호소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이며, 위험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했다"며 "국민의힘은 위험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민원 공백 차단 총력

주민등록·인감·자치법규 등 일제 정비 진행 주소체계 전환 앞두고 내달말 시스템 일시 중단

전남도가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민등록과 인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 민원서비스 전반의 안정적 전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현장 중심 점검과 단계별 정비 작업을 병행하는 흐름이다.

전남도는 13일 장흥 전남소방학교 인제관 대강당에서 도내 22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전후 달라지는 주요 행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설명회에서는 주민등록과 인감, 자치법규 정비와 비롯해 통합행정시스템 전환 등 필수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수기 인감대장의 경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60일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시군별 정비 인력 확보와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총 79명의 정비보조 인력 인건비를 예비비로 확보해 5월 중 교부할 계획이다. 각 시군은 출범 전까지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 뒤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자치법규 정비도 병행된다. 기존 '전라남도' 명칭을 사용하거나 도 자치법규를 인용한 조항을 전수 점검해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다. 시군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는 출범 이후 통·인프라를 구체화해 기업이 투자 후보지를 비교·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주소체계 전환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전남·광주 전역의 주민등록 주소 정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계로 일괄 변경되며, 이에 맞춰 주소코드와 행정시스템 정보도 함께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5시까지 주민등록시스템이 일시 중단되고,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

기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전남도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전환 이후에는 즉시 정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출범 초기 민원 집중 상황을 고려해 현장 대응 인력을 보강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강미선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추진단 통합지원담당관은 "통합특별시 출범이 압박 상황에서도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범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 통합특별시 앵커기업 유치 전략 구체화 산단·에너지·인력·정주여건 담은 디지털 브로슈어 논의

전남도는 13일 도청 정약홍실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제5차 회의를 열어 핵심 앵커기업 투자유치 추진상황과 디지털 투자 브로슈어 제작 방향을 점검하는 등 유치 전략 구체화에 나섰다.

회의에선 강원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략산업국장 등 8개 관제 실·국장이 참석해 앵커기업 투자유치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 여건을 기업이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디지털 브로슈어 제작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브로슈어에는 대규모 부지, 재생에너지, 전력·용수 등 핵심 투자 강점을 비롯해 대학·특성화고 기반 인력공급 체계, 정주여건 등 기업의 투자 검토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방안이 검토됐다.

디지털 브로슈어는 기존 투자유치 자료와 달리 기업의 투자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아 '즉시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산단 현황과 입지 여건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산단별 특성, 배후도시, 물류·교통 인프라를 구체화해 기업이 투자 후보지를 비교·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주요 산업별 투자 정보도 함께 제공해 투자제안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디지털 브로슈어를 활용해 미래 핵심산업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별 관심 분야에 맞

춘 투자제안 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원 부지사는 "기업 유치를 위해선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 투자 여부를 판단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특별시가 가진 산업입지와 재생에너지, 전력·용수, 전문인력 등 강점을 기업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앵커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전남·광주의 투자 매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브로슈어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섬박람회장 연결도로 물고임 6월까지 정비

전남도, 연약지반 일부 침하 구간 포장 보완공사 추진

전남도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연결도로 일부 침하 구간에 대해 6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연결도로 일부 구간은 연약지반 특성에 따른 부분 침하로 빗물이 일시적으로 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남도는 최근 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함께 현장 점검을 했으며, 배수시설 운영 상태와 도로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전남도는 물고임 개선을 위해 6월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등 포장 보완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 일

대 배수시설이 완료된 상태여서 해당 구간의 물고임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행사장 공사 현장의 물고임은 도로포장 전 단계에서 일부 발생한 것으로, 6월까지 포장이 완료되면 현장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시, 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함께 행사 개막 전까지 도로와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